관훈토론회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중 '거대고래' 사이에서 '돌고래 외교' 필요

일시: 2020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고정애
(관훈클럽 기획담당 운영위원·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토론



김영화
(한국일보 논설위원)



신승근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허 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홍희정
(KBS 뉴스제작1부 팀장)

미중 '거대고래' 사이에서 '돌고래 외교' 필요

고정애(사회, 중앙일보 콘텐트제작 에디터, 관훈클럽 기획담당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개헌 선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 그리고 퇴임을 1년 반 남기고 있으나 여당에 강한 그립감(Grip-感)을 보이는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내는 동역학(動力學)은 그간 한국 정치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권이 자초한 서울과 부산에서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자칫 위태롭다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권력 관리 방정식이 가능할까요? 관훈클럽에서 마련한 오늘 당 대표 토론회의 연사는 이 답을 가장 고민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 대표께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총선 직전에는 공동선대위원장 신분이었고, 지금은 당 대표 신분입니다. 공식 직함은 달라졌지만 '정치적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십니다. 이낙연 대표를 소개합니다.(일동 박수)

다음은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끝부터 김영화 한국일보 논설위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입니다. 제 왼쪽에 신승근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희정 KBS 뉴스제작1부 팀장입니다. 저는 고정애 중앙일보 콘텐트제작 에디터입니다. 먼저 이 대표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조연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박정훈 총무님과 회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올해 3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지 8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한 해에 두 번이나 초대해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운 지 꼭 열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되풀이합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방하는 편입니다. 경제는 3분기 들어 성장률과 수출 등 몇 개의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역량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양극화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우리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등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그에 따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우리가 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문명 대전환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며 국제주의를 복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는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비핵화에는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패권, 교역, 인권 등에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견제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정책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 7월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2월에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잇따라 열립니다. 그런 기회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를 맡은 지 두 달 보름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파업을 봉합했고, 제4차 추경은 매우 빠르게 처리했습니

다.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 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20 더 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에 부응해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민생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사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패널들께서는 가능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질문해주시고 이 대표께서도 핵심을 간결하게 답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클럽 회원들께서, 취재기자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 먼저 허민 전임기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대표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요. 그때는 나름 소신과 철학,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에 당에서는 자신만의 철학과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낙연만의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

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된 국정운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거나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할 생각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 있으면 당연히 직언

이낙연: 첫째, 제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민주당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현안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의 의사입니다. 당과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제가 대표가 된 지 두 달 반쯤 됐습니다만, 아마 여섯 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고요. 전화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당은 큰 틀에서 정책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책을 계승할까 또는 클린턴 정책을 계승할까, 이것이 전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고요. 잘못이 있다면 차별화하겠는가, 잘못은 당연히 시정하고 보완해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허민: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지금 당과 따로 노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님 본인만의 색깔과 철학이 없다고 한 것은 당과 따로 논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만의 무엇'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되는 '친문' 세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직결돼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대권 레이스에서 유리하

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의 후광효과를 입으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당내 세력과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특정 세력의 눈치 보는 일 없다

이낙연: 우선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제명을 했고, 어떤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됐고요. 어떤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됐고, 어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9개 정도의 TF가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만, 의원들 대부분이 무엇인가 일을 맡아서 엄청나게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낙연 스타일'입니다. 어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야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부에서 할 때보다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짜임새가 있었다, 이러면 정부한테 미안하네요. 오늘 아침 제가 텔레그램에 아주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소감을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174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무엇인가를 붙들어 잡고 실력을 발휘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당을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화(한국일보 논설위원):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지만, 당선 이후(대선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답보하는 지지율 때문에 속이 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또 하나는 임기가 내년 3월 9일까지라서 대표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뛰어서 '지지율 1등' 의미 없어

이낙연: 우선 지지율은 제가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었을 때입니다. 혼자 뛰어서 1등한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국민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데에 따른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9일까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날이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지요. 2년이라고 해서 과정이 아니고 짧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화: 현재 정부 여당에서 대선후보로 이재명 지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세 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 분의 장단점을 각각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이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대신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낙연: 우선 대선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장단점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신승근(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력한 주자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이념적 지도로 볼 때 어디쯤 있는지, 근본적으로 본인이 진보인지 아니면 보수인지…. 많은 분은 민주당 지지자분

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본인의 이념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이념 지향은 '진보적 실용주의'

이낙연: 저는 '진보적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근접했다고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선후보로 되셨고요. 제 청춘의 시작이 그분의 연설을 들으러 쫓아다니는 것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공천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승근: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진보적 실용주의'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낙연: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필수노동자들일 겁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자, 라이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한 결과로서, 모두 의원님들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이런 것들에 저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희정(KBS 뉴스제작1부 팀장): 대표 취임한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우분투(Ubuntu · 아프리카어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뜻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심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야당과의 협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중요 현안 있을 때 대화

이낙연: 우선,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국회의장님 주재로 점심을 한 번 먹었고요. 그 뒤로 매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저쪽에서 응하지를 않네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서 공통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진척이 없습니다. 상대측이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국회에서의 협치란 서로 주고받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양보를 해야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아닌지, 협치에 뜻이 있고 양보하실 의향도 있는데 청와대에 그 뜻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낙연: 청와대에서 무슨 이야기하는 일은 제가 2년 반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4차 추경 같은 것이 빨리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빨리 양보했기 때문이지요.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민: 사실 우리나라의 단임 대통령제 환경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임기 말의 고민이지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퇴임 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들고나오거나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걱정하는 느낌 못 받아

이낙연: 두 가지 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낌새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대통령을 자주 뵙는 편일 텐데요. 퇴임 이후를 걱정하시거나 그것을, 개헌안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민: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안전장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이낙연: 예를 들어 최근에는 퇴임 후 사저가 구체화됐습니다만, 그 이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내게 했을 정도로 '퇴임 이후는 잊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의식하거나 별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허민: 저도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국정운영을 계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혹시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아니면 변형된 무엇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권력구조 개편을 동반한 개헌안이 제출되거나 추진한다면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임하실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추진할 때 아니다

이낙연: 18대 국회 때 국회의원 1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헌법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회의 공동대표 3인 중 한 사람으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두께의 책 두 권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개헌을 추진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금까지는 대선주자로서 질문이 됐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낙연 스타일의 민주당', 당 운영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영화: 대표님, 민주당이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당헌을 뒤집은 것인데요. 대표님이 원칙론을 평소 강조해오셨는데, 정치 현실을 핑계로 해서 정치혁신의 명분을 쉽게 버린 것 아니신가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결정 송구

이낙연: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왜 그런 고민이 제 앞에 떨어졌을까 하는 것이 원망스러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 수도와 제2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집권당의 후보가 없고, 시민들이 선택에 제약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일까, 저나 민주당이 비판을 받더라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비전을 내놓고 서

울·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영화: 해당 당헌은 2015년에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정치혁신에 의욕을 가지고 만든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 대통령 생각도 그때와 달라진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낙연: 그것은 제가 코멘트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홍희정: 재보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대표님께서는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셨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이 지금 나온 것이 있는지, 진정한 사과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정치적 이익을 결국 선택한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낙연: 우선,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찰단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도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서는 당원 교육에서 '성인지 교육'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고요. 그런 비위의 유무 또는 교육이수 여부가 공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은 언제든지 더 보완하겠습니다.

홍희정: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시절에 재보선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비용도 보전하는 등 그런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은 결국 하기로 하셨는데요. 재보선 비용이 80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비용을 보전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지는 않았는지요.

이낙연: 추미애 대표 시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를 논의했는데 전혀 그쪽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했지요. 사실은 이것이 법제화될 수 있었다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 때 당헌에 규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당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요. 단서 하나를 붙여서 '전 당원 투표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비용 (보전)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승근: 재보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이 내후년의 대선 전초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한데 서울이나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재보선에 지면 대선도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 그러는데, 재보선을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전략이랄까요?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것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미래비전 제시할 것

이낙연: 서울도, 부산도 몹시 힘겨운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의 방심도 해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부산에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할 방책까지 시민께 내놓으면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대표님이 재보선에 가장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라서 뭐라고 토를 달기가 그런데, 약간 공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재보선 원인을 고려하면 여성 후보들을 내야 한다거나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재보선 후보 콘셉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

장을 정리하고 계신가요?

이낙연: 제가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선거기획단이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경선 방식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 투표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탈당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민주당도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질식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이 대표께서는 당에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은 없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셨는데요. 역대 어느 정당이든 의미 있는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돌아보면 열심히 눈 씻고 찾아봐도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내 파벌 인위적으로 없앤 것 아니다

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당이 심각한 내상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분들이 당을 떠나는 바람에 파벌이 없어진 것이지요. 갑자기 파벌을 없애라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도 잘 납득을 안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정부한테 자꾸 탓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회: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정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물론 사회

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당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파벌이라는 것은 정당 안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지금은 파벌이 없어진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낙연: 아니요. 긍정이냐 부정적이냐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결과로서 지금의 민주당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이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도 그때는 저희 당 안의 식구였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을 하시는 분도 그 당시 탈당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형성되고…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허민: 이른바 강성 지지자, 당내에 또는 열광 지지자, 요즘은 신문의 기사나 칼럼 등에서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문빠'라고도 표현이 되는 이런 강력한 지지기반이 당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정성호, 민주당 소속이지요. 국회 예결특별위원장이 회의 석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라고 이야기했다가 온종일 강성 지지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한 일이 있는 것을 대표님도 아실 텐데요.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팬덤'에 대한 언론 보도에 모순

이낙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지자 중

온건한 지지자도 있고 열성적인 지지자도 있지요. 저의 선친이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대충 아는데요.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팬덤에 대해서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거나, 국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열성 지지자들 중심 정치를 한 것이 폐해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든의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 관련 보도를 보면서 늘 혼자 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민: 팬덤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상대 진영 또는 정치적 반대자에게 지나친 상처를 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 전체가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친문과는 조금, 친문이라는 친문 진영의 핵심 지지자들이랄까, 이 친문 진영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대표님이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특히 팬덤의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해요. 오히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활동을 '양념'이라고 하셨고, 대표님은 얼마 전에, 9월이지요. 이들의 존재를 '에너지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금태섭 탈당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원'이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했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한 모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거나 반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빠로 표현되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여전히 당의 에

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판과 지지, 양쪽 모두 에너지

이낙연: 우선 금태섭 의원의 그런 충고의 충정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식 모두가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양쪽 모두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요. 저도 때로는 억울하다고 마음이 들 정도로 공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희정: 당 대표 맡으신 지 8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에 김홍걸·이상직·윤미향 의원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탈당했고, 1명은 당원권이 정지되었습니다. 아까도 비위 의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당이 아닌 탈당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정공법은 아니지 않나요? 진정으로 엄정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낙연: 그런 과정에서 탈당이 나온 것이지요.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지요. 그 경우 탈당하지 마라, 우리가 제명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야 더 옳았을까요?

신승근: 대표님, 취임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 심사 중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해보라고, 예산을 받고 싶으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마 신공항 관련한 논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X자식들, 국토부 차관 나오라고 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집권당이 오히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이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박범계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낙연: 그때 이미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이 '오만끼'이지요.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정치인은 크게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근: 자제를 당부한 말씀이시지요?

이낙연: 네.

신승근: 아까 당 지지율을 여쭸는데 자세히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부터 다른 정당에 견줘서 젊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기는 하지만 20대 젊은층에서 이탈 조짐이 있고 그런 조사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안 좋은 징조로 보이는데, 젊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당 대표로서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젊은층 이탈, 당정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

이낙연: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보다 더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한 세대이지요.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쳐서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고, 특히 대학 신

입생들마저 캠퍼스의 공기 맛을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선생님을 뵙거나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취업이 어렵고, 어렵사리 취업한 쪽도 갑자기 휴업이나 휴직이나 해고가 되는 굉장히, 이중삼중의 고통을 더 받게 됐지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청년층이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는 것은 젠더 문제라든가, 취업, 주거, 교육, 보육 주기마다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런 것을 변화된 또는 증폭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다음은 연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화: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니까 여당에서 '이 수사는 야당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수사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검찰에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원전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검찰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수사는 원전정책의 적절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의 위법 행위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이낙연: 우선 청부 수사냐 뭐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당내에서 있었지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누가 어디를 방문했다, 또는 고발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했었지요. 그런 것이 의심을 살 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집행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한 수사이다.' 누가 그런 이야

기를 했는지, 익명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영화: 말씀드리면 어제 대전지검 해당 수사팀에서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낙연: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승근: 국민이 피곤하게 느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두 사람한테 자제를 당부했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두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두 사람의 갈등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윤석열 총장,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안타까워

이낙연: 우선 이번 일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지요. 그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분이 아쉬운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승근: 방금 답변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윤 총장이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

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연히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하나요, 아니면 임기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도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이 (진퇴를)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요.

신승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도 대표님은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윤 총장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더 당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충분히 그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윤 총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낙연: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민: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런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지요. 대표님은 어제인가요? 공수처장 후보 반드시 추천 관련해서 내일, 즉 18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은 후보 추천이 안 되면 다음 주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2개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되면 야당에 줬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가 되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도 밝히셨는데 공수처 출범, 정기국회에 매듭짓겠다고 하셨지요. 만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될 경우 대표님이 생각하는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되면 국회법 심의절차 밟을 것

이낙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민: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이낙연: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해가는 것이지요.

허민: 네.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권한 축소 이러한 논리를 강조했는데,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상당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의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낙연: 검찰개혁은 참으로 오랜 숙제이지요. 그리고 지난 겨울이었습니

까? 그 혹한 속에서 수많은 시민이 서초동에 몰렸던 것이 어떤 특정인이 예뻐서만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갈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주된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야당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허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7개 부처가 관련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소위 울산 선거 공작 의혹,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월성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자료 은폐 의혹,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중 어떤 것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진행돼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들 케이스를 전부 공수처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그것을 정치인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민: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그냥….

이낙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인이 가져와라, 마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 아닌가요?

허민: 정치권에서 여태까지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1호 대상이라는 말이 아주 공개적으

로 나왔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당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낙연: 그런 정치인들과 똑같이 말하고 다니라는 주문은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허민: 이상으로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홍희정: 검찰개혁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추 장관 말씀을 하시면서 스타일상의 문제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 장관 인사로 이른바 권력수사팀 상당수가 해체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사지휘권을 여러 번 행사하셨고요. 감찰권도 그렇습니다. 평검사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스타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실질적인 행보가 옳다고 보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문제되는 건 주로 '스타일'

이낙연: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검찰 수사지휘 중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지요. 어떤 사람은 수사라인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든가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 장관의 경우에는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스타일의 문제였다, 전적으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홍희정: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휴대전화비밀번호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조차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휴대전화비밀번호공개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이낙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지털증거의 완벽한 확보가 없으면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 간부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국민은 저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는 방어권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제가 중간에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이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시작했고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검찰권 남용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검찰총장에게 시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많습니다. 주로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시비를 제기해놓고 시비를 받고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 정권을 수사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현 정권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같이 답변해주시지요.

검찰, 시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

이낙연: 우선 위법 여부에 국한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 큰 불명예이고 불행이지요. 다수

의 검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 탈원전 수사 관련해서는….

이낙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김영화: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석 정당인 정의당 대표가 저소득층 징세하고 연금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인식인데요. 진보정당 대표도 금기에 도전하는데 민주당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대표님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말을 아끼시는 편인데, 이 자리에서 징세 문제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낙연: 세제 문제는 어디 한두 군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장기적 또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제 문제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화: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법을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대표님이 코로나 상황을 들어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기업규제법도 지금은 조금,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때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 민주당이 노동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당 차원에서 임기 내에 노동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노동개혁 필요하지만 때가 아니다

이낙연: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가 꽤 됐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나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함께하자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개혁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칼을 들이미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직장 자체를 갖기 어렵고 유지하기도 힘든 마당에 유연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민주당은 말을 바꾸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은 대표님이 두 달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먼저 제정을 약속했던 법입니다. 그러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오락가락한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오락가락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제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그것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칙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또는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논의를 해야 합니다. 논의해야 하고,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

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그중 하나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과의 상충 여부라든가 법체계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강하게 묻자고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삼는데, 지금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지금까지 3개뿐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국회법이고요. 또 하나는 5·18 관련된 2개의 법인데, 5·18 관련법 2개의 법은 이해찬 전임 대표 시절에 이미 당론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론으로 했는데요. 나머지는 당론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 내용에서도, 그리고 상임위에 나와 있는 법안 자체도 서로 간의 쟁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야 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조정도 하지 않고 이것이 당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경직된 처리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은 법사위가 심의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사위는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신승근: 오늘 오후에 뜨겁게 달궈질 이슈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인데요. 오늘 2시에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절차를 문제 삼아서 기존에 김해공항 확장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상 백지화해 갈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 신공항이 논란은 있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논쟁 끝에 지난 2016년도에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뒤집는 것이 정당한지, 뒤집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것 역시 부산 선거, 그다음에 다음 대선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고려 없었다

이낙연: 우선은 총리 산하의 검증위원회는 100% 민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총리실이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 같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이전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으로 정하면서 발표한 것이 있었지요. 기본계획이라든가 무슨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울·경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로 지적하신 것을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 부·울·경에도 검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입니다. 그쪽에서 추려보니까 쟁점이 22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22개를 4개 분과인가로 나누어서 검증을 열 달 가까이 했지요.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토부 안이 맞는 것 같다, 어떤 쟁점은 부·울·경의 문제 제기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쭉 판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동안 유보적이었는데, 그중 새로 신설하게 될 활주로, 활주로를 그렇게 신설하게 된다면 어떤 산을 깎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걸리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 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이 있어야 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 법제처가 판단을 한 것을 받아서 검증위원회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승근: 그것과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검증위가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는 발표를 하면 다시 영남권 신공항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을 이미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덕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대구·경북 같은 데는 벌써 반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재적 대선 주자이시니까요. 그러면 새롭게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우선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안에 꼭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대구공항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부지까지 확정됐지요. 그래서 과거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가덕도만을 놓고 무슨 검증을 하거나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검증하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근: 관련해서 세종시로 국회 이전을 하는 문제를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11일인가 충청권에 가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한 이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회의장하고 국회의장실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가더라도 본회의장을 특히 서울에 남겨두면 똑같이,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이는 것이 아닌지, 해법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여야 간 충분히 협의할 것

이낙연: 우선 여야 간에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그동안 물밑 대화에서는 상당수의 상임위를 세종에서 연다는 데에는 근접이 돼 있었지요. 거기를 출발선으로 해서 논의를 해가면 당면한 해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세종분원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요. 예를 들면 부처가 세종에 있는 그 소관 상임위를 세종에서 열자든가 하는 등의 논의가 있는데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빨리 그런 문제에 근접하기를 바랍니다. 야당에서도 마냥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그러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계적 이전이라는 개념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집에 여성 몸에 대한 권리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련한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선공약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낙연: 대선공약을 전면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는 신체보호 그리고 종교계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보호, 이것을 어떻게 양쪽 다 존중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를 놓고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적에는 정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

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민: 부동산 문제를 여쭐게요. 부동산 대책이 내놓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평가이고 표면적인 평가입니다. 스물세 번의 대책에도 결국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우선 정부의 실패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대표님은 가장 큰 잘못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종합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가구 분리 대비 못 한 게 부동산 정책 패착

이낙연: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또는 예측을 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가 4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9만 6,000 늘었습니다. 이른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아까 작은 이야기입니다만, 스물세 번의 대책 중에는 이른바 쪽방촌의 주거복지에 관한 것도 포함되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대책과는 조금 다른 것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민: 정부의 실패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낙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뼈

아픈 패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허민: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그런데 이후에 오히려 전세 대란이 일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어저께, 16일입니다. 전세 난민 고백을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역시 임대차 3법의 피해자인데, 지난 9월에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가 급작스럽게 집을 찾으러 다니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전세를 구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달 말에 이사를 하는데, 저 역시 전세 대란의 피해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나도 당했다'라는 '전세 난민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하고요. 이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거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께 송구

이낙연: 우선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측을 제대로 했느냐, 또는 예측을 했다면 대응을 했느냐,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주거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달리 매우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있지요.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다음에 전·월세 문제, 임대차의 어려움에도 바로 그런 문제가 개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수요 변화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를 거기에 추가한다면 계약갱신제도가 급속히 변화하다가 보니까 그대로 눌러살고자 하는 계약갱신이 많이 늘어서 공급이 거기에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예전에 100개가 있었는데 그중 한 80개가 계약갱신을 했다면 시장에는 20개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찾는 분도 계약갱신으로 들어간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못한 분들이 찾으실 텐데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이 제도의 큰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요즘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발표가 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민: 공급대책의 강화 방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낙연: 네.

허민: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낮췄지요.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증언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당초 대표님의 생각은 9억 원 이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 부동산, 임대차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한 결정이랄까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는 오히려 다른 판단을 한 것이지요. 저는 대표님이 유력한 대선주자 후보 중 한 분이고, 또 여권의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실세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겸 설명을 해 주시지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 많은 고민 있었다

이낙연: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몇억이었고, 당은 몇억이었고, 그 전제가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당에서도 어떤 사람들끼리는 9억 원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끼리는 6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췄다는 표현도 꼭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6억 원이다, 9억 원이다가 실제 거래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시세에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몇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인가 하는 고민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저에 대한 표현은 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 못 돼서요. 전혀, 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민: 당과 청와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요. '6억 원으로 낮춘 것은 청와대의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여러 가지 측면, 각자의 다 의견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수용이 안 돼서….

이낙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내대표는 9억 원 생각했고, 정책위 의장은 6억 원을 생각했습니다.

허민: 저는 대표님이 9억 원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낙연: 저는 그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얼마였고 당은 얼마였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당에서는 원내대표는 9억 원을 주장했고 정책위 의장은 6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허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표님과 문 대통령 두 분의 교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6억 원으로 판단을 하셨고, 대표님은 9억 원으로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러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회: 이쯤에서 플로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현재 패널에서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곧 부분 개각이 있을 듯한데, 김현미 장관은 거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당에서의 입각은 예정돼 있습니까?

이낙연: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최근에라는 뜻이겠지요. 대통령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개각을 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이지요. 당만 입각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홍희정: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또 재정 조달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이 문제는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의는 환영한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한 사람당 한 달에 50만 원씩을 드린다고 치면 지금 기업과 가계가 내고 있는 소득을 두 배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럴 용의가 있는가 등을 감안해서, 그러나 기존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방법이 추가로 있는가, 그런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딱딱해서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 중 말랑말랑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외교·안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KBS 추석 프로에 출연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테스형!〉이라는 가요로 세상을 풍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낙연: 사람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승근: 외교·안보 분야 첫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모든 관심사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면 어쨌든 북미,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거처럼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최소한 남북관계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 좁아지는 것이 아니

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미, 대북 협상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 존중·유지되길 기대

이낙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만큼 톱다운 방식(top down system)을 선호하셨지요. 그 점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공백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100일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리뷰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축을 하더라도 바이든 신정부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보다는 동북아시아 쪽으로 우선순위를 주어서 제가 염려하는 공백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싱가포르 합의가 확인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북미 간에 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북한이 그 기간 동안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낼 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화: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한일관계를 풀려고 모색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 총리 입장을 보니까 강제징용 비상 판결 때 우리가 합의를 했던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완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산매각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은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정부 여당에서 구체적으로 오가는 해법이 있는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일관계, 상당 부분 개선 분위기

이낙연: 우선 법원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다운, 또 정부는 정부로서 합당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그것을 판독하는가, 그런 것은 법원의 일일 것이고요. 아까 현금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물밑에서 부단히 제안을 하고 상대의 입장을 타진하고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근접의 분위기는 상당한 정도까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을 다녀오셨는데요. 아베 정권 시절보다는 많이 부드러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로서도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잘 활용하고, 그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는 일본 국민의 삶을 좋게 한다든가, 일본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든가, 일본 국민께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거나, 또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기여를 했다, 스가 총리가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은 스가 총리로서 대단히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화: 방금 말씀대로 도쿄올림픽에 굉장히 우리 정부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쿄올림픽 개최할 때까지만 강제징용 기업에 자산 현금화를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당의 김진표 의원이 일본에 가서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올림픽까지는 유예한다는 이 안이 정부 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까?

이낙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김진표 의원께 확인을 했더니 대화 내용이 꼭 정확하게 보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밑에서, 실무선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저쪽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하고 일본 측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런 과정은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화: 지금 한일관계를 조금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직후 여당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항일의병 내지는 죽창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당에서 스가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도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사이에 바뀐 것은 아베 총리가 퇴임한 것밖에 없고 스가 총리도 아베 총리의 입장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집권당이 안보 문제에서 널뛰기하는 모습, 이런 것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낙연: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면 일본도 당연히 도쿄올림픽을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에서 그렇게 큰 견해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적어도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민: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나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가 궁금한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아무래도 가장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유엔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강조를 이미 밝히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평화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핵화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인지 일단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문제 해법, 종전선언이 우선

이낙연: 우선 시간적으로 먼저 될 수 있는 것부터 해가는 방식이라면 종전선언이 그다음 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싱가포르 합의의 확인, 유지, 발전을 바이든 신행정부에 제안했는데요. 비핵화 문제는 우선 북미 간에 주로 다루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을 기저에 놓고 하노이처럼 빅딜을 시도하다가 좌절을 맞는 그런 것보다는 스몰딜 또는 미들딜의 방식으로 비핵화에 접근해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평화의 과정에 계속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내년 1월에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때 대외정책 노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월 1일 신년사에도 나오게 되겠지요. 거기에서 평화 또는 안정을 위한 북한의 결단 같은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민: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그 주체와 트랙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의 시퀀스(sequence)라고 할까요, 순서나 시간의 흐름상 비핵화가 후순위로 미루어진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개념, 우리에게 지금 더 확실히 적실성이 있고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자고 먼저 말을 건넸고요. 이에 바이든 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의 범위랄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입니다. 대표님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점이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궁금한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이랄까 해법,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지만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 입장

이낙연: 우선 비핵화가 후순위냐 그런 설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가자, 당장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것이지요. 후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공식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북한과의 합의 문서 중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맺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선언도 제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그 해결의 최대 관건이 북핵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식문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유했으면 합니다.

홍희정: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

이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강대국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중 사이에서 주변 국가 어려워질 것

이낙연: 미중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중 화해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외교 분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수십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자 3개일 것이다. 코로나(Covid), 중국(China),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미중 무역 갈등을 극대화시켜 가는 그런 방식일 것인가, 또는 조금 더 온건한 방식일 것인가, 저는 후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한미동맹을 우리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놓고요. 중국·일본·러시아는 물론이고 요즘 신남방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종합하는,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확대균형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외교 다변화라고 해서 신북방·신남방 그랬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자는 것은 되지만, 외교 상대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북방은 북한에 막혀서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신남방정책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매번 생길 때마다 서방이냐 동방이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확대균형,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가되 늘 균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본은 한미동맹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화해든

주변 국가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지요. 말레이시아 마하트리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중이 두 마리의 코끼리이고 지구는 풀밭 같은데, 두 코끼리가 싸워도 풀밭은 망가지지만 사랑해도 풀밭은 망가진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의 레토릭이지만, 미중이라는 두 거대한 고래가 헤엄치는 바다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고래 외교' 같은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체격은 작지만 훨씬 더 날렵하고 매력 있는 그런 외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 개념으로 제가 다듬은 것은 아닙니다만, 비유하자면 '돌고래 외교'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정: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나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미국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낙연: 그저께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지요. 우리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RCEP 서명이 CTPPT 가입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투의 설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사적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에서 다자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그렇다면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실체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기후·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다자 체제, 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할을 하면서도 양자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플로어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은 세 가지이고 그중 한 가지로 언급한 것이 5·18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왜곡금지 조항 등은 너무나도 과도한 언론자유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유신헌법 하에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이낙연: 그런 우려가 없도록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용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다시 탈원전 문제인데요. 탈원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통치행위 또는 대선 승리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는 당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법치통치 영역 밖에 있는 사안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탈월전' 초법적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낙연: 우선 헌법하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옛날식 발상이지요. 로벤슈타인 시절의 이론인데요. 요즘은 어떤 것도 법치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정착돼가는 이론이지요. 법치의 범위 밖이다, 그것이 아니지요. 단지 정책의 선택은 지도자가 국민께 약속하고 정부가 추진해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초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1시간 40여 분에 걸친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 평소에 사적으로 볼 때보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굉장히 전투적인 토론을 해온 것 같습니다. 좋은 충고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신 충고를 충분히 감안해가면서, 또 정제된, 그러면서도 할 일은 하는 그런 정치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일동 박수)

사회: 이낙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패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계에 임해주신 중계팀들 그리고 취재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낭문